

## 소비쿠폰 논란 계기 인권침해 개선... '속도·실행력' 관건

광주시, 인권감수성 긴급 실태조사

인권침해 사례 6개 유형 59건 발굴  
공공서비스 전반 인권 기준 재정립  
市 "중앙정부 연계 제도 개선 추진"

〈속보〉광주시가 '소비쿠폰 색상 구분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전면 개선에 착수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실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했음에도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광주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긴급 인권감수성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까지 총 6개 유형 59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발굴했다. 59건의 인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불필요한 자격 요건 7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3건 ▲공공시설 접근권 침해 22건 ▲홍보물·행정용어에 따른 침해 5건 ▲기후위기, 디지털 등 새로운 인권 이슈 12건 ▲기타상황에 따른 인권 침해 10건 등이다. 불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사례로는 인력교육 대상 학교 선정 범위 제한으로 대안학교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박탈, 외국인 주민의 인권 작풍 공모전 참가 자격 제한, 광주 생활가이드 책자 제공 언어 부족으로 소수 국적 외국인 불편, 재난 대비 시민행동 요령 홍보물 인권차별적 요소 등이다.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득 취약계층에 추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자동차 대리점 서류 제출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사례도 드러났다. 또 소득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등에 공공차량을 무상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외부에 시정 관련 홍보물을 부착, 이용자들의 정서적 위축을 유발하기도 했다. 홍보물이나 사업명에 '저소득층', '최중증 발달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의 단어를 표기해 당사자·가족에 대한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사례도 확인됐다. 공공시설의 접근권 침해 사례는 영산강 서창 감성조망명소 보행자 접근성 부족 및 교육약자 이동 자유 제한, 김치타운 도굴놀이터 시설 장애인 이용 불편, 비반려인과 반려인 공공시설 이용권 상충 침해, 시립정신요양병원 노후

화로 입원환자 치료 환경 저해 등이다. 기후위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부상한 새로운 인권 침해 이슈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미흡, 에너지 취약계층 건축물 폭염 완화로 거주환경권 침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발생, 온라인 위주 광주시 미니테양광 보급 지원사업 주요 홍보 방법으로 인한 디지털 취약계층 평등권 침해 등이 개선 과제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확인된 인권 침해 사례를 전면 개선하고 행정 전반의 인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소비쿠폰 색상 구분' 논란에 따른 것으로 인권감수성을 진단하는 계기로 삼고 공공서비스 전반의 인권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한 사례 발굴에 그치

지 않고 일선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인권 침해 사례가 추가 발굴돼 최종 개선 과제를 이체 막 행정안전부와 공유한 상태"라며 "각 사례별 개선 조치를 구체화하고 지금까지 임의 규정이었다던 인권영향평가를 강령 규정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시 차원에서 개선할 점은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소득 수준 별 선불카드 색상을 구분해 인권 침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변은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특별광역연합' 큰 틀 합의

20일 광주서 만찬회동 사전 의견 조율  
새 정부 '5극3특' 국정과제 선도 의지  
나주시청서 27일 선포식...추진 본격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21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양 사·도지사는 전남 광주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특별광역연합 결성 추진 의미와 의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조직·기구 운영 방안,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사·도지사는 오는 27일 나주시청에서 개최하는 특별광역연합 선포식을 앞두고 협약

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었다. 협약서에는 특별광역연합 추진 의미와 방향, 공동사무의 포괄적 범위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동사무에는 기존에 언급됐던 광역 SOC, 환경, 교통, 관광, 산업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업 분야의 경우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와 전남의 에너지·RE100이 공동 성장 과제로 제시돼 공동사무로 대응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선포식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도 참석한다. 광주·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은 김경수 위원장의 "광주·전남이 5극3특 추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충청권 광역연합이 출범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이 발 빠르게 특별광역연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정부 지원을 끌어냈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에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포함시켜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성장 엔진 선정과 지원, 교통·인재 투자 등을 실행 전략으로 설정했으며



한수, 한수에 집중 제1회 대한노인회동구지회 바둑·정기대회가 21일 오전 광주 동구 마사회 광주지사서 열린 가운데 대회 본선 진출자들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애리기자·조영권인턴기자

Today	
특/별/대/담-정철원 담양군수	5면
키워드로 보는 명화이야기·'홍수'	14면
KIA 기아아구 기능성은 얼마나?	16면

특히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14조7천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광역연합을 먼저 추진하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 집행 시범사업 등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동사무 집행 수준에 머물 경우 행정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특별광역연합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7일에 발표할 하는 것보다 사전에 한번 만나는 게 좋겠다 생각해 강기정 시장과 만찬을

가졌다"며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특별광역연합 추진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일부에선 특별광역연합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자는 데 강시장과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정 기자

###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2025 8.30.-11.2.

너라는 세계  
YOU, THE WORLD

디자인은 어떻게  
How Design 인간을 끌어안는가  
Embraces Humanity

광주비엔날레  
Venue: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Hosts: Gwangju Metropolitan City / Gwangju Biennale Foundation

### 2025 광주 방문의 해

축제가 온다!  
광주시가  
왔다

즐거움이 온다!  
민주가 온다!

빛이 온다!세계인이 온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GWANGJU 2025 Hyundai World Archery Championships  
2025. 9. 5. ~ 12.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GWANGJU 2025 World Archery Para Championships  
2025. 9. 22. ~ 28.